父子·祖孫가정 아이들 "가난이 무슨죄여"

버려진 '도시빈민'

〈3〉 빈곤 대물림과의 전쟁

학원 보내달라는 아들·손주녀석에
가장노릇 힘든 아빠·할머니 긴 한숨만
'경제력 양극화→교육 양극화' 악순환 끊어야

#1. 김승민(45·가명)씨는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부자(父子) 가정'의 가장이다. 버스기사인 김씨는 광주 A임대아파트에서 살던 중 지난해 12월초 일반 주거지로 이사를 했다. "잘 키우고 싶지만 살면 살 수록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게 힘들것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형편은 임대아파트에서 살 때 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생활비가 두 배 이상 더 들기 때문이다. 김씨의 한 달 수입은 130만 원. 월세·의료비·난방비·전기료 등을 내고 나면 고작 50만 원이 남는다. 임대아파트에 살 땐 두 자녀 모두 학원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김씨는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더 힘들어진다. 아이들에게 가난밖에 물려줄 게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2. 광주 B임대아파트에서 할머니(70)와 함께 사는 임종섭(11·가명)군은 조손(祖孫)가정 어린이다. 할머니는 손자를 학원에 보내고 싶지만 엄두도 못 낸다. 생계급여 43만원으로 월세·난방비·전기세 등으로 20만 원을 쓰고 나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다. 할머니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르는 손자를 야단쳐야 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이 일정 구역에서 모여 살도록 한 임대아파트 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공포는 희망의 상실,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임대아파트는 모두 10개 단지로 ▲서구 3개 단지(3416세대) ▲북구 5개 단지(7120세대) ▲광산구 2개 단지(3384세대) 등 모두 10개 단지다. 주민 수만 1만3920세대(2만7079명)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는 하루 벌어 먹고 살만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도,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기도 힘들다.

부모 세대의 경제력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고스란히 자녀 세대의 경제력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배울 게 없는' 환경도 가난을 대물림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실의에 빠진 사람들, 희망보다 더 큰 좌절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단지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웃을 봐도 배울 게 없고,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르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얘기다.

정부의 복지·임대주택정책도 문제다. 예를 들면 이렇다. 홀로 사는 70살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결혼한 아들은 따로 살고 있다. 아들·며느리·손자·손녀 등 4명이 한 식구다.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아들 식구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더하면 월 172만8895원이다.

하지만 아들이 한 달에 224만원 이상을 벌면, 혼자 사는 노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노모를 봉양할 만큼 아들이 충분히 벌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급자에서 탈락될까 두려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선 사회 곳곳에 분산, 섞여 살 수 있는 정책과 주거 대책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광주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주영종 관장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계층별 다양화만이 침울한 아파트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들의 자활의지를 일깨울 수 있다"고 말했다. 〈끝〉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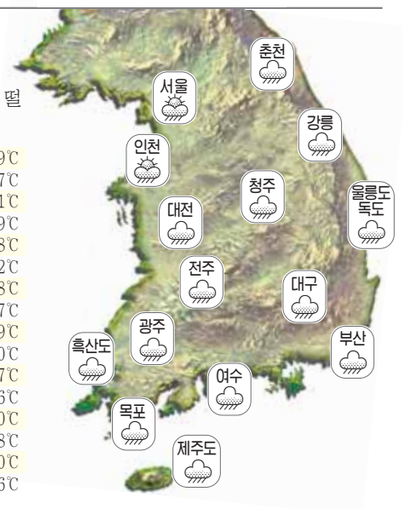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6분 해짐 18시 38분 | 달뜸 07시 11분 달짐 20시 13분

달디단 봄비

오후에 비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겠다.

광 주	흐리고 비	8/9℃
목 포	흐리고 비	6/7℃
여 수	흐리고 비	11/11℃
나 주	흐리고 비	8/9℃
완 도	흐리고 비	8/8℃
구 례	흐리고 비	10/12℃
강 진	흐리고 비	8/8℃
해 남	흐리고 비	7/7℃
장 흥	흐리고 비	8/9℃
순 천	흐리고 비	9/10℃
영 광	흐리고 비	7/7℃
진 도	흐리고 비	6/6℃
전 주	흐리고 비	8/10℃
군 산	흐리고 비	5/8℃
남 원	흐리고 비	8/10℃
흑산도	흐리고 비	6/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후북서	1.5~2.5m
먼바다	남서후북서	2.0~3.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5.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3.0~4.0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증지수
관심	보통	보통

	밀물	썰물
목포	03:04 15:25	08:16 20:35
여수	10:11 22:25	03:48 16:0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 씨						
최저/최고	-1/12	2/14	2/15	7/13	8/16	6/18

국내 성인 절반

"자신이 간염에 걸린지도 몰라"

간염은 국가 관리대상 전염병이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은 자신이 간염에 걸렸는지 모르는 등 간염 인식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로슈는 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6%가 간염에 걸렸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C형 간염 여부를 모르는 응답자는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염 환자 수는 1만5000명이며, B형간염 유병률은 8%로 호주·미국 등의 4배 수준이다. B형간염과 C형간염은 만성간염의 주요 원인으로 간경변과 간암 등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장정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만성 B형간염이 증식기로 들어서면 5.1%가 간경변, 이 가운데 0.8%가 간암으로 이어지고 C형간염의 5~20%가 간경변으로 진행된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간염은 증상이 크게 없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간염 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간염 검진 경험률은 33.6%로 저조했다. /연합뉴스

'춘기 석전대제'

지난 12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대성전에서 중요무형문화제 제 85호로 지정된 '춘기 석전대제'가 열렸다. 석전대제는 공자 등 선현을 기리는 제사로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234개 향교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지역 학원 교습 밤 10시로 제한 할 듯

도교육청, 조례 개정 추진

전남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학원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등 전남지역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원비 인상 억제를 위한 학원 지도·점검 강화, 학원정보 공개, 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 추진 등이다.

학원 지도·점검 대상은 교습비 초과 징수, 고액 개인과외, 불법 영어캠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원어민강사 관리, 학원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이다. 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운영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 2010년 전남도의회와 갈등을 빚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다시 추진해 초등·중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밤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경찰서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교육청별로 구성된 관계기관 실무대책반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학원의 건전 운영,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학교자치 조례안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의결 앞두고 교육·사회단체 촉구

14일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의 광주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사회단체가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광주시의회가 조례안 재의를 가결하면 조례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자치조례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는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에 역행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의회는 정치적 관단보다 교육적 접근으로 더 이상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교과부는 시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하면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가결되면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만약 시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하면 조례 폐기 서명운동 돌입 등 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31일 시의회를 통과한 학교자치조례가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관단, 재의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한다'는 등의 조례 규정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석했다. 또 '교사의 평가권'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교사회·교무회의·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특정 기구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자치조례안을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교과부와 갈등, 법적 소송 등을 감안하면서까지 조례안을 가결할 지 주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